



주요 내용

개념 전 국민(Universal)을 대상으로 노동요구 등 조건없이(Unconditional), 정기적(Periodic)으로 개인(Individual)에게 지급되는 현금(Cash)

* BIEN(Basic Income Earth Network)

쟁점

찬성 및 반대

찬성 기본소득이 삶의 질 개선에 기여 전 국민에게 최소한의 소득 보장	VS	전 국민 대상 현금 지급보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가 우선 반대
--	----	---

재원 조달

찬성 근로소득공제 폐지 등 세제 개편 및 조세부담률 상향 시 재원 마련 가능	VS	기본소득 도입 시, 전 국민 세부담 증가 또는 빈곤층 혜택 축소 우려 반대
---	----	--

해외 사례 **캐나다('17)** : 주민 4,000명 대상, 연 16,989 캐나다달러 지급
당초 3년으로 계획했던 기본소득 실험이 예산 부족으로 1년만에 종료

근로유인에 미치는 영향

찬성 기본소득은 취업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므로, 취업 시 지급이 중단되는 실업급여에 비해 근로유인에 긍정적 효과	VS	기본소득으로 일정 수준의 생계가 보장되면 사회 전체의 근로 의욕 감소 반대
--	----	--

해외 사례 **핀란드('17~'18)** : 실업자 2,000명 대상, 월 560유로 지급
기본소득, 근로유인에 긍정적 효과 없음
※ 연간 근로일수 : 기본소득 49.6일 vs 실업급여 49.3일

해외 사례

- [핀란드]** 실업자 1인당 월 560유로(75만원) 지급('17~18년)
→ 기본소득이 근로유인을 높이지 않아 실험 종료 후 폐기
- [스위스]** 기본소득 지급 근거를 명시하는 헌법 개정안 발의('16년)
→ 국민투표 부결(찬성 23.1%, 반대 76.9%)
- [나미비아]** NGO 모금 자원, 930명에게 월 100나미비아달러(7,000원) 지급
→ 기본소득의 효과 불분명, 자원 확보 문제로 정부가 도입 거부

01. 주요 주장

The simpler, the better	美 사회보험을 연 1.3만달러 기본소득으로 대체 시, 제도 단순화로 행정비용 2,000억 달러 절감(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복지제도 효율성 제고	기본소득이 현 복지제도를 대체 시, 수급자는 본인의 필요에 따라 복지 소비를 자율적으로 결정(Heritage Foundation)
새 시대에 맞는 새로운 정책	자동화로 인한 일자리 감소 해결을 위해 기본소득 도입. 최저임금 인상 등 기존 노동정책은 비숙련 일자리 축소(Andrew Yang) * 시로 인해 시간당 20달러 이하 일자리의 83%, 20~40달러 일자리 31%가 사라질 것(CEA)
기본권 보장 수단	기본소득을 통해 저소득자, 여성, 아동 등 경제적 약자 빈곤 해소, 생계보장으로 원치 않는 노동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확보(BI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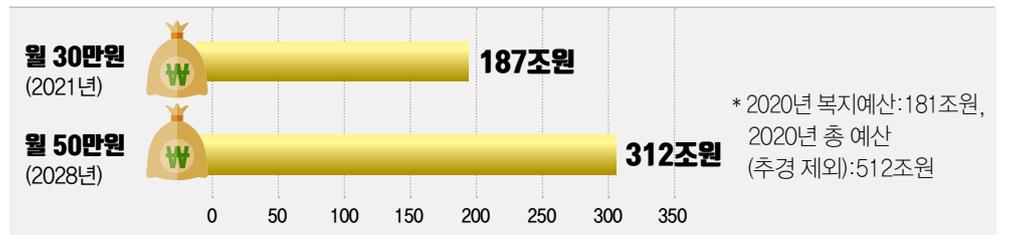
02. 쟁점

기존 복지과 병행 여부

	찬성	반대
완전 대체	기존 복지제도를 기본소득으로 일원화	예산의 증액 없이 수혜계층 확대 시, 취약계층의 혜택은 오히려 축소
일부 대체	생계급여를 기본소득으로 대체, 그 외 복지제도는 유지	전 국민을 대상 기존 생계급여 수령액 보장 시, 과도한 예산 소요
병행	기존 복지제도 현 수준 유지, 재정여력 내에서 기본소득 추가 지급	1인당 기본소득 수령액이 낮아 생계보장 효과 미미, 현금성 포플리즘

재원 조달

기본소득 지급액 별 필요 예산
* LAB 2050



※ 해외사례 : 美, 전 국민에게 연 5천\$(빈곤선의 40%) 지급 시, 연방정부 세수의 50% 소요, 사회보장·의료보험·방위비·이자 지출을 제외한 연방 예산과 비슷한 수준(CBPP)

기본소득 모의실험

* 최한수(2019)

증세 없이 1인당 월 13만원 지급 가능(생계급여 53만원의 24.5%)

* 기본소득 재원 : 근로소득공제 폐지(월 11.6만원/인), 복지 관련 현금성 급여 대체(월 1.3만원/인)

현 생계급여(53만원) 수준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려면 30%p 이상 소득 세율인상 필요

* 소득공제 폐지 및 현금급여 대체와 함께 과표 구간별 소득세율 10%p, 20%p, 30%p 인상 시, 60세 미만 전 국민에게 각각 월 25만원, 36만원, 48만원의 기본소득 지급가능

근로유인 저해 가능성

찬성	반대
기본소득은 취업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므로 근로유인에 영향없음	기본소득을 통해 각 개인의 생계문제가 해결되면 '일하려는 동기'가 줄어들어 사회 전체의 생산성 저해 우려
※ 취업 시 지급이 중단되는 실업급여에 비해 근로유인에 긍정적 효과	

03. 해외 사례

전 국민 대상 기본소득 시행 사례 전무

	국가명	주요 주장
천연자원 판매수익 배분(미국)	 미국 알래스카 ('82~현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유 등 천연자원 판매수익을 주민에게 배당 (연 400~2,000달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급액이 작아 생계보장 효과 낮음 > 부존자원 및 인구·지리적 특성으로 타 국가에 적용 불가
정책 효과 부재(핀란드), 예산 부족(캐나다)으로 실험 종료	 핀란드 ('17~'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업자 2,000명을 무작위로 선정 후 월 560유로(약 75만원)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소득과 실업급여 간 근로의욕 비교 : 큰 차이 없음 * 연간 근로일수('17) : 기본소득(49.6일), 실업급여(49.3일)
	 캐나다 매니토바 ('74~'7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300개 가구에 최저 생계비의 60% 지급 (소득 1달러 당 50센트씩 차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시간 감소(남성의 1%, 여성의 3~5%) > 삶의 질 일부 개선(병원 입원을 감소(8.5%), 교육 지출을 증가) > 예산 부족 및 정권 교체로 중단
	 캐나다 온타리오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년 이상 빈곤선 아래에 머문 18~64세 주민 4,000명 무작위 선정 1인당 연 16,989캐나다달러, 부부는 연 24,027캐나다달러 지급 (소득 1달러 당 50센트씩 차감) * 他 복지제도와 중복수급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초 3년 간 추진 예정이었으나, 예산 부족으로 1년 만에 중단
기존복지 축소 우려로 국민투표 부결(스위스)	 스위스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소득 지급근거를 명시하는 헌법 개정안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투표 부결 * 찬성 23.1%, 반대 76.9%
NGO 기금을 재원으로 빈곤국 대상 실험(나미비아, 인도)	 나미비아 ('08~'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치베라-오미타라 주민 930명 대상 NGO 모금을 통해 월 100나미비아 달러(7,000원)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도 도입 시, 자원 마련을 위해 한계세율 및 부가세 인상 등 거론 > 정부, 기본소득의 구체적 효과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도입 거부
	 인도 ('11~'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디아프라데시 주민 6,000명 대상 유니세프 기금 활용, 성인 1인당 200~300루피(미성년 50%)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소득 실험대상의 생산 활동이 비 대상에 비해 12%p 증가
수급 대상을 빈곤선 미만으로 한정(브라질)	 브라질 ('03~현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빈곤선 미만 계층에 가구당 월평균 190헤알(4.2만원) 지급 현금보조, 교육, 식료품, 가스 등 4가지 복지 프로그램 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악화로 '15년 이후 예산 삭감 * OECD, 재정악화에 따른 관련 예산 삭감에 대한 우려 표명('19)

04. 시사점

재원조달 방법, 재분배 효과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 필요

기존 복지제도를 유지하면서 기본소득 추가 지급 시 막대한 예산 소요

* 일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을 실험했던 캐나다조차 두 차례 모두 예산 문제로 중단, 유일하게 지속 중인 완전기본소득 모델(알래스카)은 지급액이 작아 생계보장 효과 미미

기본소득이 기존 복지제도 대체 시, 빈곤층의 혜택이 오히려 축소될 우려

* 유럽 4개국 시뮬레이션 결과, 現 복지예산으로 기본소득 시행 시 1인당 기본소득액은 빈곤선의 21.4%~50.2% 수준, 現 복지 수혜 계층은 기본소득 시행으로 혜택 축소(OECD)

■ 내용 문의 : 경제정책팀 홍성일 팀장 02-3771-0311 / 안창경 선임연구원(0367) ckan@fki.or.kr



글로벌 싱크뱅크 FOCUS



FED

코로나19가 총수요 및 총공급에 미친 영향: 실시간 분석

Geert Bekaert, Eric Engstrom,
Andrey Ermolov 2020. 5

주요내용요약

코로나19 發 “총수요 충격”으로 2020년 1분기 미국의 실질GDP 감소($\Delta 6.6\%$), 2020년 2분기에는 “총수요·총공급 복합충격”으로 GDP 감소폭 확대($\Delta 34.3\%$)

* 미국의 2분기 실질GDP 충격($\Delta 34.3\%$) 중 총수요 요인은 $\Delta 14.8\%$, 총공급 요인은 $\Delta 19.5\%$

VAR모형에 의한 코로나19 회복경로는 상당기간 회복이 불가능한 L자형 전망, 반면, 설문조사에서는 상대적으로 빠른 회복(checkmark recovery)을 예상

시사점

코로나19 충격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요에서 공급 부문으로 전이되며, 심리적 기대에 비해 회복에 오랜 기간이 소요될 우려 존재

→ 장기적 관점의 기업 생산 활동 지원 대책 필요



<https://www.federalreserve.gov/econres/feds/files/2020049pap.pdf>



THE WORLD BANK
IBRD · IDA

한국의 제조업 생산성의 장기 변화 요인 분석

Lee, Yoonsoo
2020. 6.

주요내용요약

최근 40년간 한국 제조업의 변화 분석 결과, 주요 생산성 향상 요인 중 기존 기업의 혁신·연구개발의 생산성 향상 기여도가 가장 큼

* 생산성 향상 요인 : ① 기존 기업의 혁신·연구개발을 통한 효율성 증대
② 새로운 기업의 신산업 진출 ③ 低생산성 산업 → 高생산성 산업 전환

고부가가치 산업 전환에 따른 생산성 향상은 전자 등 일부 사례에 국한, 최근 창업률 감소로 신생기업의 성장 기여도도 감소 추세

시사점

한국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① R&D 등 제조업 혁신을 위한 투자활동에 대한 정책적 지원, ② 기업환경 개선을 통한 신산업 분야 창업 촉진 필요



<https://documents.worldbank.org/en/publication/documents-reports/documentdetail/702591592244062356/long-term-shifts-in-korean-manufacturing-and-plant-level-productivity-dynamics>